

최근 경기 평가와 정부 정책 방향

- 출처 : 한경미래니엄포럼
- 일시 : 2005년 5월 30일
- 연사 :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주최 : 한국경제신문, 현대경제연구원 공동

주제 발표

참여정부는 거시경제 안정, 경제시스템 효율화, 정부혁신 등 세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정책을 추진중임

(한덕수 부총리) 저희 정부는 지금 세 가지 측면에서 경제 정책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단기적으로 거시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적절한 성장, 고용의 안정, 물가의 안정, 우리 국제수지의 안정 등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 시스템의 효율화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자본, 노동, 기술 등은 상당히 유동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땅이 비록 한 나라에 제한되어 있지만 기업의 활동무대가 외국으로 옮겨지면서 간접적으로 땅도 토지도 유동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나, 무엇이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느냐 하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바로 이것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합니다. 결국 중장기적으로 시스템에 있어서 세계 멤버원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식입니다.

셋째로는 정부 혁신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경제 시스템이 중요 한데 이런 의미에서 보면 정부의 혁신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와 민간의 역할, 이것을 어떻게 잘 정립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효율적인 국가경제가 될 수도 있고 아주 형

단기적으로는 거시 편없는 저 효율의 경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라는 경제의 안정을 통해 것이 정부 자체의 효율성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광범위하 위환위기 쇼크를 완 게 민간 경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전하게 극복하는 것 이기 때문에 정부가 얼마나 효율적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 이 중요함 가경제력이 결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이 세 가지를 역점으로 해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취 우선 첫째로, 단기적인 거시 경제의 안정입니다. 결론부터 말 약해진 경제 산업 씀드린다면 저희가 외환위기의 쇼크, 이것을 그냥 간과할 수 없 구조는 아직도 개선 습니다. 물론 외환위기도 극복했고 상당히 많은 구조 개혁이 진 되어야할 부분이 많 행되었고 우리의 경쟁력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 이 남아 있는 것으 나 총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우리는 외환 위기의 쇼크로부터 완 로 판단됨 벽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장률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환위기 전까지는 그래도 5%, 6%, 7%를 넘나드는 성장을 계속했습니다. 이것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6.9%까지 내려갔습니다. 다음해에는 물론 반동적인 역할도 있었겠지만 9.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8.5%의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당시는 벤처 열기가 뜨거웠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성장세가 외 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160조에 달하는 공적 자금을 집 중 투입하면서 단기적으로 경제를 끌어올리는 것이지 구조적으 로 완전히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톱클래스에 오른 것은 아니라고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3년 만에 국가의 경제·산업구조가 다 바뀔 수 있다면 그건 세계적 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외환위기 직후 회복세를 보이던 성장률은 2001년에 다시 3.8% 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전세계적인 IT경기 침체가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해인 2002년에는 성장률이 다시 7% 수준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거의 두 배 수준입니다. 사후

적으로 보면 이것 역시 1999년과 2000년에 광범위하게 추진된 내수 촉진 정책이 2002년에 7% 정도 성장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예컨대 신용카드 사용 확대, 확대 재정 등이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3년에 성장률이 3.1%로 2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4.6%를 기록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외환위기 직후에 마이너스 6.7에서 9.5-8.5-3.8-7.0-3.1-4.8 주로 2분의 1씩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 저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국가 산업 및 경제구조가 아직도 구조조정이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올해 한 4% 내지 5% 정도의 성장, 정부의 목표는 연초의 5%를 내걸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달성할 수 있다면 처음으로 2년 정도에 걸쳐서 4~5%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는 유일한 2년이 되는 것입니다. 외환위기 직후 8~9%씩 성장했던 건 마이너스 성장률에 대한 하나의 반작용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시 경제 안정을 위해 정부는 저금리 정책 유지, 재정의 조기 집행 등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거시적으로는 우선 저금리정책 이것은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통위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로서도 이런 금통위의 정책을 항상 존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 재정은 그렇게 확장적이지 못합니다. 연간으로 보면 관리대상 수지로 봤을 때 1% 정도 적자를 내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IMF 같은 데에서는 계속 이 적자를 확대해서 경제에 자극을 주어야 한다는 건의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일단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쪽에 역점을 두고 차입 등을 통해서 재정을 확대하는 문제는 우리 정부의 재정 여건이나 국내외 경제동향을 보면서 신중하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금리정책이나 재정정책이나 우리가 쓸 수 있는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부담이 되는 단기 부양 정책을 지양하고 있음

수단들을 제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항상 정부는 모든 사용 가능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은 정책도 있고 검토 중인 정책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후적으로 경제에 부담을 주는 그러한 정책은 가능한 지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부문을 다시 부양시켜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과 같은 경우 과거 경험을 통해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결국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소비가 계속 마이너스 머물게 된 주요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정책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되도록 지양하면서 정책을 펴다보니 분명히 여러 가지 제한은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국민들한테 경제에 대한 안정적인 기대감도 줘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재개발과 관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보완 대책을 마련 중에 있음

한편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은 우리 국민 전체의 생활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정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조세 문제도 그러한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개발에 대해서도 법이 정한 범위에서 정부가 심사 권한을 발동할 것입니다. 다만 아직 제대로 계획이 세워져 있지 못한 영성한 계획들은 오히려 소비자들한테 문제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간을 가지고 보완하도록 시간을 주도록 할 것입니다. 아마 부동산 재개발 관련해서 최근에 8개 정도의 인가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부가 보완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완을 하라는 조치를 했다는 건 결국 분양을 조금 뒤에 하라. 민간 분양을 뒤에 하라는 것입니다. 재개발을 하게 되면 대략 한 단지가 4천 세대씩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일반 분양은 500세대 정도 되거든요. 이 500세대를 한 달이나

한 달 반정도 보안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나머지 조합원들을 위한 3500세대의 건설은 계속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재개발을 검토한다고 해서 4천 호수에 달하는 프로젝트가 모두 중단이 되어 소위 아파트 공급이 줄어서 나중에 가격이 뛰는 현상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물론 500세대가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중심적인 이윤의 창출 역할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정부의 행정조치라는 건 그러한 것을 좀 더 완벽하게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여 정부는 주어진 경제 여건이 맞추어 거시 경제 안정화 정책을 지속 추진 중에 있음

결국 우리가 저금리, 주어진 범위 내에서의 재정의 조기 집행 등을 통한 확장적인 재정 정책, 또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 질 종합투자계획, BTL(Build Transfer Lease), 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징수권을 기초로 만들어지는 소위 자산유동화 채권 증권 등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을 SOC에 투입하는 것과 같은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단기적으로는 민간 투자를 좀 활성화해야겠습니다. 민간 투자는 크게 설비 투자와 주택 투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택 투자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투기를 크게 유발하지 않으면서 공급을 다소 늘리는 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설비투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의 투자 활동에 대한 규제와 애로 사항 등을 파악해서 이를 해소해주면 상당부분 민간 투자가 늘어날 부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농업기반공사가 민간은 아니지만 농업기반공사가 여러 가지 농업기반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업기반공사가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미리 조달하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조금 빨리 끝날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시도해보고 할 것입니다.

제가 아마 내일부터는 12개의 큰 투자기관들의 사장님들을 직

투자 활성화에 걸림
 돌로 작용하는 규제
 및 애로 사항들에
 대해서는 완화 또는
 개선 조치를 취할
 것임

접 개별적으로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 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보고 개별적인 어프로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마다 하는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는 계속 정부의 국책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경제팀이 같이 덤벼들어서 해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각종 공공부분에서도 좀 더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특별한 국회의 예산조치가 필요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지출을 늘리고 소비 쪽에 대해서는 민간 소비가 올해부터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효과를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4분기 성장률은 좀 낮았지만 그 내용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4/4 분기 3.3%와 올해 1/4 분기를 비교해 보니까 작년도 3.3% 중 2.6%가 재고 때문에 성장을 했기 때문에 실질성장은 0.7%이고, 0.4%는 통계상의 불일치이고 그러면 0.3%가 남는데 0.1%는 소비에서 그리고 0.2%는 수출에서 성장이 됐습니다. 올해 1/4 분기 2.7%를 비교해보면 재고는 오히려 -0.2가 됐고 통계상 불일치는 0.1% 이고 소비는 4/4분의 0.1%에서 1.1%로 늘어났고 순수출은 0.2%에서 1.7%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2.7%입니다. 저는 2/4분기도 고성장은 하지 않겠지만 대개 이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조금 나은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하반기에는 좀 더 잠재 성장률에 가까운 성장률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올해 목표 5% 성장은 안 되는 것 아니냐? 당장 그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망대로만 하면 5%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정부로서는 5%라는 목표를 가지고 모든 저희가 할 수 있고 큰 무리가 가지 않는 정책수단을 동원

올해 정부가 목표한 5% 성장은 어렵지만 이를 목표로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추진할 것임

할 것입니다. 5%는 정부의 목표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5%를 우리의 목표로 계속 가지고 가겠다 했더니 저런 현실성 없는 부총리가 앉아있으니 경제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전망을 고치라고 하면 내일이라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반전하기 시작하는 회복의 분위기를 잘 가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해야 할 모든 일을 철저하게 점검하면서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스템 혁신은 지금까지의 구조개혁 혁신을 좀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노동분야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노사간에 단체 협약들을 맺고 있는데, 그 단체 협약이 이러한 고용조정에 대해서 굉장히 비탄력적입니다. 단체협약 자체가 노동법이 정하는 것보다 근로자 쪽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면 그건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체협약에 대해서 노사가 뭔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는 외국 투자자들이 원하는 고용의 조정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노동의 유연성에 대해 광범위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 도입에 의해서 산업조정 생산라인을 교체해야 할 경우도 경영상 긴박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도가 나야 경영상 긴박한 사유라고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광범위한 유연성을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노사간에 충분히 협의를 해 가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대시키게 되면 외국인 투자도 더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고 버젓한 일자리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내 기업들의 투자도 늘리고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을 붙잡아서 우리의 고용을 늘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기업 쪽의 혁신은 역시 투명성과 시장에 의해서 판정 받는 시

기업 활동이 투명성과 시장 원리에 의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의 개선도 중요함

시스템을 좀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주식 시장이 아직도 투명한 기업의 지배구조 등과 같은 부문에서 신속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좋은 지배구조를 갖추는 데 장애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찾아내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 완화, 규제 개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부가 세계화 시대에 시장 매커니즘이 제대로 작동이 되도록 하는 여건을 만드는 규제를 없애주는 역할, 이걸 정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전성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론 좀 더 강화되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없애야 될 건 없애고 강화해야 할 건 강화하는 이런 규제개혁의 합리화를 분명히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감한 업적 평가 (정책 품질 평가 등) 시스템 강화를 통해 정부 혁신에 나설 것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 혁신문제는 결국 기업이 도입하고 있는 소위 업적에 대한 평가, 이런 시스템을 과감하게 정부에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책 품질 관리제도라는 게 이미 도입되어 있고 올 하반기부터는 전 부처에 대해서 이러한 정책품질 관리 제도가 집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자료를 못 보셨을 텐데 두꺼운 바인더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느 공무원이 어떤 정책을 할 때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정책을 검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간의 협력은 어떻게 하고, 언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고, 집행하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고쳐야 되고, 정책 품질 관리에 대한 사후적인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정책 평가 결과를 봉급체계에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가에 대한 노력들을 정부에서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 결국 국가경쟁력이라는 하나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부총리로서 이 모든 것들에 자신 있느냐고 질문하시면,

저는 자신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적응을 잘하고 훌륭한 국민인지를 제가 정부에 있는 33년 동안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저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건 책상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책상 앞에 앉아있는 분들은 국민이 얼마나 저력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느낍니다. 또한 우리 정부와 언론 그리고 정치권 모두가 경제를 살리고 세계의 1등 국가 경쟁력을 만들겠다는 데 잘 합심해 나간다면 저는 틀림없이 우리는 되고도 남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최근의 경기 회복조짐, 이러한 분위기를 잘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서 외국의 평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5월에 런던과 뉴욕 등에 가서 피치사도 만났고 무디스와 같은 기관들을 굉장히 많이 방문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만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한국 경제의 저력에 대해서는 일말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와서 주식을 사는 원인이 아닌가 봅니다. 우리 2.7% 발표하는 날 주가는 요동도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책상 앞에 앉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투자가와 국민이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와 연관해서 저는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해야 할 것은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할 건 뭐냐 저는 네 가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것입니다. 지금 10대 성장 산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보면 프로젝트 차원에서 거의 100개 정도가 진행이 되고

정부는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 육성, 서비스 산업 활성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동북아 중심 국가 도약 기반 마련 등을 지속 추진할 것임

정부는 6월 중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것임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경제팀은 그렇게 개발된 프로젝트를 빨리 사업화시키는 쪽으로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에 대한 투자입니다. 교육, 법무, 병원, 의료, 관광, 레저 이런 쪽에 저희가 많은 투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 군데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현지 토지 값이 오르는 문제는 있지만 그때 그때마다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제라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든지 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벤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계속 더 투자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동북아의 허브로서 방대한 기반산업을 가지고 있고 우수한 인력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열도 아주 높아서 동북아의 허브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기 위해 투자자들, 특히 외국투자자들이 계속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빠진 건 뭐냐, 하나가 있는데 그건 전통적인 산업으로서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 그것들은 앞으로 아주 대규모로 투자가 늘어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든 제가 자동차 기업을 하시는 분들과 통화도 하고 몇 군데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투자를 계속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역시 미국에도 공장을 지어야 되고 유럽에도 지어야 되고 중국에도 지어야 됩니다. 이건 일종의 다변화 전략이지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산업, 또 우리 요즘 조선이 엄청 잘 되고 있지만 조선에 시설 투자를 늘리겠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대형 산업들은 상당히 성숙이 되어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은 창업 보육 기능의 확충, 자금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겨질 것임

회 재정경제부가 중심이 되어서 6월중에 벤처 활성화 보완대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소위 창업초기에 이러한 벤처기업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전국에 약 200개 정도의 창업 보육 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돈도 없고 아무런 시설도 없는 벤처 투자가가 처음에 보육 센터에 들어가서 기술도 개발하고 영업을 늘려 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보육센터 아닙니까? 이 보육 센터가 200개정도 있지만 이것을 벤처 캐피탈하고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대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대학, 지자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한테 이러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를 위탁운영을 시키게 해서 자본과 사업에 대한 경영지원과 함께 보육센터에 있는 기술이 바로 결합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청이 중심이 되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한 1조원 정도의 모태 펀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모태 펀드는 창업투자 조합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한 투자를 해 줌으로써 조합의 투자에 대한 위험도를 좀 줄이는 것입니다. 저희는 3년 미만의 초기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모태 펀드의 출자 비율을 현행 조합전체 규모의 30%까지 출자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을 50%까지 늘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모태조합이 출자를 하게 되면 이익을 같이 받는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모태 조합 출자분에 대해서는 수익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를 넘는 수익에 대해서는 소위 창투조합의 주된 역할을 하는 창업투자회사들한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도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우선 각각 2,000억 원과 1,200억 원의 중소 벤처기업 전문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7월중에 소위 벤처기업 협회 중심으로 패자부활 프로그램 1호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패자부활 프로그램은 실리

콘밸리에서 저희가 보듯이 일단 실패를 했지만 최선을 다 했다 면 그러한 잘못은 면책해서 그 기술을 가지고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사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쌓았던 지식이 없어지지 않고 그 분들이 다시 기업 쪽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가 패자부활 프로그램인데 7월중에는 1호 대상자가 선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임

(송희연 아시아개발연구원 이사장) 우선 근본적인 성장에 있어서 7, 8년 동안은 그래도 괜찮다고 봅니다. 중국이 저렇게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중국 경제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하지만 2008년 올림픽 2010년 엑스포까지는 충분히 잘 갈 것이다. 그래서 그런대로 우리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인가 성장 동력이 뭐냐, 잠재성장률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산업은 투자에 한계가 있고 결국 지식기반 산업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식기반 산업이 경제에 있어서 R&D 원천기술을 기초로 하는 제조, 그리고 지식기반 서비스업, 교육, 의료, 관광, 레저, 비즈니스, 법률 서비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주도적인 성장산업이 아니냐고 부총리님께서 말씀 해주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직업을 지난 7년 했습니다.

현재의 우리나라 학교 구조가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인프라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교수 생활을 했는데 그 이전에는 저도 현장을 많이 뛰어다닌 사람입니다. 중소기업도 많이 가 봤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가보니까 총론은 다 좋은데 학교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데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사회다 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결국 지식기반은 외국도 보니까 학교를 기초로 해서 했습니다. 요새 제가 BT에 대한 보고서를 비교적 광범위하게 읽고 있습니다. 브루킹스, OECD 등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21세기 전반부는 BT가 주도하는 시대가 된답니다. 저도 사실은 감이 안 옵니다. BT를 하려면 IT, NT가 같이 퓨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론 황우석 교수가 잘 하고 계시지만 우리 학교 구조로 봐서 과연 R&D베이스가 될 수 있을 정도의 큰 변화를 읽고 있느냐 참 문제입니다.

학교 개혁을 위해서는 외국인 학교 유치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됨

그 다음에 서비스산업을 주도산업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서비스산업에 들어가 보면 결국 어학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자유 구역에 외국인 학교 분교를 적극 유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 학과도 주인이 있고 학교도 주인이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학교를 이 땅에서 운영할 때 선의의 경쟁자가 있어서 그래서 학교 개혁의 변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외국인 학교를 유치하는 데에 있어서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경제 발전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두 번째는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2004년 기업경영 분석 결과라는 자료입니다. 국내 제조업의 현금 보유가 660억 달러, 66조 원 정도 된답니다. 이걸 기업들이 잘 쓰고 있지 않나 봅니다. 결국 기업들이 꼭 해야 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이 돈을 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7, 8년 후에 희망이 있다, 아! 정부에서도 소프트 인프라에 굉장한 투자를 하는구나. 소프트 인프라가 바로 학교 같은 것. 이런 것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박상용 연세대 교수) 부총리님께서 1/4 분기 경제 성장 2.7%가 절대 수준은 낮지만 질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게 썩 나쁜 건 아니라고 하였고, 저를 포함한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 공감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질문은 왜 언론과 여당에서까지 성장률 수준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국민들과 게임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적으로는 괜찮은데 양적으로 조금 낮은 걸 가지고 너무 언론이나 여당에서 문제를 부각하면 이게 실제 경제에 더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 왜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부드럽게 잘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증대된 고용 불안, 소득 불안 등을 해소하는 것이 노동 시장 유연성 제고에 필수적임

다음으로 시스템 혁신과 관련해서 노동 분야의 유연성, 대법원 판례에는 상당한 정도의 유연성을 허용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단체 협약 때문에 오히려 더 경직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체 협약을 통해서 노동의 유연성이 높아지려면 경제위기 이후에 크게 증가한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소득불안 문제가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든지 아니면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해소가 되어야 유연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연성이 높아져야 된다는 데에는 다 공감을 하지만 어떻게 할 것이냐, 고용 및 소득 불안 요인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진지한 논의가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정부에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에 맞게 정부 혁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부 혁신을 위해서
는 낙후된 인사 시
스템의 개혁이 우선
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제가 보기에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시
스템이 많이 바뀌고 있지만 아직도 관료 사회 시스템은 크게 바
뀌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상당히 오
랜 기간 동안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경제 시스템을 유지
할 것으로 생각하시고 계시는데 민간 부분의 시스템은 바뀌지만
관료 사회의 시스템, 특히 인사 시스템 같은 것은 옛날이나 지
금이나 별로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인사 시스템의 변화
없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데 관료사회가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료 부분의 시스템 개혁, 특히 인사
부분의 시스템 개혁이 어떤 구상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
니다.

하이테크 산업 육성
을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금융 부
문의 개선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앞으로 투자를 주로 하이테크 성장 동력 산업 중
심으로 집중해야 되고 전통적인 산업은 아무래도 좀 줄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의
금융시스템이 하이테크 성장 동력 산업을 시장 매커니즘에 의해
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한 의
문이 듭니다.

민간 부분의 어떤 금융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산업구
조를 키울 수 있는 자금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던지 아니면 정부 투자기관, 출자기관을 통해서 간
접적으로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벤처와 같은 하이
테크 산업들은 전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사업이고 이런 것
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이 들어가서 지원을 하면 십중팔구 실패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정부대로 지원을 잔뜩 하고 상
당부분은 효과가 없이 끝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쪽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덕수 부총리) 확실하게 여기에서 해야 될 사안은 제가 전통

산업을 줄인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투자의 원천이 어디일 것인가, 성장동력산업,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서비스산업, 그리고 외국인 투자, 그리고 전통적인 대기업이 하던 성숙 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투자가 많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투자를 더 늘리는 것은 저희 정부로서는 환영하고 금융기관도 사업성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은 아직 그런 성숙산업이기 때문에, 다만 그 분들의 최근의 예를 보면 그렇게 많이 늘릴 생각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가 걱정 겸해서 했고, 정부정책을 통해 그런 걸 줄이거나 할 생각은 없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지만 리스크가 큰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국내의 투자 여건은 아직 미성숙되어 있음

그리고 우리 금융 산업이 이런 리스크가 높은 하이테크 산업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적절하게 안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지금까지는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벤처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만들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벤처 캐피탈 제도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일부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리스크를 보고 용자만이 아니고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는 이런 시스템은 아직 우리나라에 존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85년도에 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처음 만들면서 창업투자 회사라는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그 동안 창업투자를 하셨다는 분들의 상당수가 전통적인 담보대출 형식으로 창업투자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도 많아 이런 벤처 캐피탈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정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벤처 캐피탈은 자본을 투자할 뿐만 아니라 경영과 마케팅 같은 걸 확실하게 지원도 하고 장악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정부 제도는 처음에는 혹시나 창투사가 투자해 가지고 중소기업의 경영권을 좌지우지 할

까봐 일체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아무리 엉터리로 경영이 되더라도 창업투자회사로서의 발언권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소위 벤처 캐피탈이 금융 회사가 아니고 비즈니스를 발전시키는 소위 비즈니스 개발 회사가 벤처 캐피탈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좀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 벤처 캐피탈의 역할을 적극 활용하여 시장 원리에 따라 기업이 성장하고 퇴출될 수 있는 여건 형성이 중요함

다만 여러 가지 재원 조달의 기법을 첨단적인 기법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금융 산업이지만 벤처 캐피탈의 본질은 비즈니스를 디벨롭하는 회사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벤처 캐피탈에 대한 소위 육성책, 리스크를 정부가 같이 져 주는 것 이런 대책들은 앞으로 계속 강화되어갈 것이고 또 벤처 캐피탈이 제대로 되려면 코스닥 시장이 잘 되어 결국 퇴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런 부분들에서 아직은 퇴출에 대한 장벽이 상당히 많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고, 특히 M&A 시장이 활성화되어서 이런 분들이 벤처 캐피탈의 중심이 되어서 계속 M&A를 통한 하나의 기업도 발전하고 창업투자회사도 발전하고 벤처 캐피탈도 발전하는 쪽으로 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가 바꾸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약간 우리 언론이나 정치권이나 국민들의 참을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중소기업의 주식을 취득했다가 그 기업을 정상화 시켜서 나중에 떼돈을 벌었다, 이것 참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참아야 됩니다. 이것 안 참고 어떻게 자본주의가 되고 벤처 캐피탈이 발전하겠습니까? 이것은 외국 자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크 테이킹을 했으면 그 결과로 떼돈을 벌어야지요, 못 버는 것이 이상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심중판구는

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조사를 시켜봤어요. 맨날 우리 외국 자본들 돈 벌었다고 하는데 망한 외국 자본은 없느냐. 망한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엘지 카드 잘못 사 가지고 몽땅 날려버린 외국 자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본질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참을성 있게 인정해 주는 것들이 우리나라에 더 있어야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세계화시대에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매치 되는 것이지 그게 매치가 안 되면 시장 경제는 절름발이 시장경제가 된다는 말씀드릴 겁니다.

공무원단체 시행을 통해 정부의 인사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 혁신이 아직 충분히 인사 시스템 쪽에 반영이 안 되지 않느냐 그건 사실입니다. 아직도 철밥통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소위 고위 공무원단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고위 공무원단체가 뭐냐하면 국장급 이상은 어느 부처에도 속하지 않고 정부에 속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장급 이상은 다 하나의 풀이 되어서 그 풀에서 장관들이 배를 다 쓰게 됩니다. 그러면 안 데려다 쓰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공무원의 커리어로서는 사실상 끝장이 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물론 국가로서는 1, 2년 교육을 보내고 다시 실력을 쌓게 해서 매력 있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엄청난 하나의 제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수요자가 선택하는 공무원, 그 수요자가 아직 국민까지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런 효율을 중시하는, 능력을 중시하는 조직의 장이 이런 선택권을 갖게 되고 또 인사 위원회가 끊임없이 이런 고위 공무원단을 관리하고 하는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상과 인사가 연결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

은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거의 전 부처에 보상과 일하는 것이 연결되는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물론 보너스 같은 경우도 A, B, C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잘 안 될 것입니다. 언론사에서도 잘 안 될 것이고, 대개 평가라고 하면 윗사람이 욕먹기 싫으니까 전부 다 90여점 다 줘 버리는 것 아닙니까? 상대 평가 잘 안 하거든요. 따라서 향후에는 상대평가도 강제로 하게 하고 해서 보너스와 연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인사 시스템에 있어서는 전문성과 실력이 있는 공무원이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 훈련 쪽을 좀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경제 시스템 측면에서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는 사회 안전망 확충과 동시에 추구해야 할 과제임

노동의 유연성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 안전망과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세계화와 관련해서 강조를 할 사항이었지만 시간 때문에 생략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세계화 속에서 어떻게, 소위 최대한 세계화의 이익을 얻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해외에 마음대로 수출하고 또 싼 원자재 마음대로 수입하고 투자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계화라는 것은 결국 경쟁이 더 치열해 지는 것이고 국가 간에 장벽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 매커니즘에 의해서 많이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반드시 탈락자가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기업도 탈락자가 생기고 개인도 탈락자가 생깁니다. 경쟁에서 탈락한 개인과 기업에 대한 배려, 특히 개인 탈락자에 대한 배려를 안 하면 세계화는 진행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화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회 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의 필수 불가결한 요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사회 안전망에 대한 예산을 보면 OECD

향후 경제 부문에서 민간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공공 지출을 줄이고 이를 사회 안전망 확충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중에서 꼴찌거든요. 30개 국가 중에서 30위입니다. 그러니까 가야 할 길이 아직도 굉장히 멍니다. 그러면 국가의 예산이라는 건 제한이 있고 세수를 걷는 것도 제한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회 안전망을 늘리겠다는 것이냐, 저희가 생각하는 건 지금까지 우리의 경제 관련된 예산에 있어서 투자가 25% 정도 됩니다. 선진국을 보면 그게 적은 나라는 7%, 많은 나라는 16%인데 우리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는 필요했지요. 그게 우리 경제의 발전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경제의 민간부분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아까 송학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 기업들이 66조 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660억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보면 은행에 단기 6개월 미만의 예금으로 나와 있는 것이 400조. 그리고 보험회사가 200조, 기타 합치면 시중에 여유자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800조쯤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800조가 제대로 된 출구를 찾지 못하면 부동산 투기로 나타나거든요 이 800조를 가지고 생산적인 쪽으로 넣어 보자는 것이고 그게 결국은 BTL사업입니다.

과거에는 정부 예산으로 하던 것을 민간이 렌트료를 받고 경영도 해 주고 민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남는 예산의 여유 분을 국가가 사회 안전망 강화에 돌려 보자,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 안전망에 대한 예산의 비중이라는 게 10% 정도 언저리 일 것입니다. 선진국은 27%에서 30%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자는 것은 세계화에 대한 확고한 정책을 하겠다는 것과 거의 같은 강도로 정부가 추진할 정책 방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분기 성장률 2.7%에 대해서 비판의 여론이 많습니다. 물론 2.7% 성장했는데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지요 아마 비판은 있을 텐데 그러나 저희는 정말 열심히 설명을 했습

니다. 그런데 그런 비판은 왜 좀 더 잘해서 4, 5% 못 했느냐 하는 질책이기 때문에 그건 기꺼이 받고 그렇다 해서 그것 때문에 무리하게 나중에 부작용을 끼칠 정책 쪽으로는 가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커뮤니케이션이 미흡했다기 보다는 결국 각자가 가지는 경제를 보는 시각과 철학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2.7%에 만족하고 있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교육 부문에 있어 적극적인 외국인 학교 유치에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송희연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외국인 학교 유치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저희는 우리 교육 기관과 경쟁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외국 학교 유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의 학교 유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국가의 철학이나 문화 그런 것들을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 깊게 문제들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학 쪽에서는 좀 더 격렬한 경쟁이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는 숫자만 가지고도 우리 대학의 정원을 다 채울 수가 없는데 무슨 외국인 학교냐, 외국인 대학이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가 공급보다 적다고 해서 새로운 기업이 나타나면 안 된다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경쟁력 있는 학교가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모범이 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거라면 그걸 너무 억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대학 쪽에 있어서는 격렬한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국내 기업들이 현금은 가지고 있으면서 안 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대통령님도 모시고 투자에 대한 회의도 하고 했

기업의 투자활동은 기업 자신들의 이윤 추구 목적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며 정부는 애로 사항을 개선하고 기업 투자 여건 형성에 주력할 것임

지만 기본적으로 투자는 역시 기업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6조 원을 가지고 계속 현금 상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애국심을 가지고 그 분들에게 보고 투자를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다만 정부는 그 분들의 애로를 주의 깊게 듣고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분들이 66조 원을 가지고 투자 쪽으로 나와서 버젓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분명한 건 저희가 외환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과거보다는 기업이 엄청나게 합리적인 결정을 한다는 걸 느낍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이익을 볼 수 없는데 정부가 투자를 원한다고 해서 투자를 해 준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정부가 그런 투자에 대해서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도 많이 줄었고, 이제는 기업이 판단해서 이익이 날 수 있는 데라면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새로운 분야를 이분들이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최근의 기업도시라든지 지역의 관광레저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새로운 분야를 우리 기업들이 들어오게 해 주는 것이지요 또한 차세대 성장 동력에 있어서의 기술개발 등을 도와드린다는 좋은 인력을 많이 잘 교육시켜서 경제에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결국 기업이 사업을 할 때 제대로 된 인력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BT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BT 산업은 아직도 너무 리서치 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산업 쪽과 좀 더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화가 없는 한국에 있어서의 BT, 앞으로의 경쟁에서 상당한 약점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BT라는 게 몇 개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약 분야에 있어서도 기초적인 리서치 부분이 있

고, 그 다음에 우리 황우석 교수님이 하는 식으로 의료와 연관이 되는 장기이식 등과 같은 분야가 있는데, 다행히 황우석 교수님이 하시는 분야가 제일 어려운 BT의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앞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개 그런 부분들은 더 산업과 밀착이 되어서 우리나라 BT 산업이 발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BT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여건이 뭐냐, 한 5, 6년 전부터 저희가 계속 BT, IT를 추진해서 각 대학에 엄청나게 많은 인력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BT 회사가 나타나서 사람 모집한다고 하면 구름 떼처럼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셀튼이라는 외국계 BT회사가 그걸 경험했다고 합니다. 지원 인원 130명 중에서 전원이 석사학위 이상이고 그 중에 20명은 미국사람이고 110명은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인데 너무나 우수해서 진짜 외국 투자자도 만족하고 자기도 너무나 만족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역시 사람을 키우는 건 산업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 정부의 비대화된 조직 구조가 정부 혁신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김중웅 현대경제연구원 회장)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임자가 추진했던 정책에서 큰 변화가 있기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부총리가 새로 업무를 맡으시면서 우리 한국 경제가 당장 풀어야 할 시급한 문제 내지 문제 핵심을 더 자세히 말씀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시스템 혁신 관련해서 저는 정부에서 정책 품질관리가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효율성을 위해서 애쓴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반가운 마음은 들지만 요새 정부의 효율성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인사문제를 지적하듯이 비대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부총리 책임 또는 권한 밖이라고 생각하지만 청와대 내지 부총리실 등에서 기구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정책의 상충 문제, 효율성 문제에 관해서 부총리 권한 내에서는 어떻게 조정하실지 궁금합니다.

또 효율성을 위해서 규제 완화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YS정부 이후 많은 규제 완화가 있었지만 아직도 계속 의미 있는 또는 효율적인 규제완화가 되지 않아서 아쉬운 감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임 부총리께서는 시장기능 효율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구체적 정책내용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경제의 문제는 단기적으로 부동산 금, 금리 정책, 환율 정책 등 금융시장 측면에서 풀어나가야 할 것임

한편으로 지금까지는 주로 실물경제에 관해서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금융시장에서 풀어야 한다고 늘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대한 말씀을 더 해 주셔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개인부채가 507조 원, 부동산금이 460조 원, 대기업의 현금 보유도 66조 원 가량 된다고 하는데 이런 자금이 생산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은행과 비은행과의 비균형적인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하실지 그게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금리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저금리 수준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의 경기 상황과 관련해서 그 방향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고금리나 저금리라는 말 자체의 기준이 적정금리 수준을 전제로 한 범위 내에서 어떤 것이 저금리이고 어떤 것이 고금리인가 라는 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금리 수준이 과연 적정금리 수준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적정금리 수준이 유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정책 변수의 효율성을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대내외 금리의 역전 현상이 점점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저축성 예금 금리의 마이너스 금리 때문에 저축 동원이 어렵다고

본다면 금융시장의 자금 순환의 효율성을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과거의 환율정책 문제도 방향은 옳은 데 정부가 너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여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절상 폭 또는 스피드가 너무 빠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금융시장에서의 정책변수 내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좀 더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는 경기 여건을 감안할 때 저금리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임

(한덕수 부총리) 우선 정부의 금융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단기적인 금융정책과 중장기적인 시스템으로서의 금융,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금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우리 인플레이션이 3% 정도 간다고 보면 지금의 금리는 상당히 낮은 금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금리는 지금 경기가 회복 중에 있기 때문에 금통위도 그렇고 저희 재정부도 그렇고 이러한 체제를 좀 더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금리가 소위 경제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상황이 된다면 그건 금통위에서 서로 잘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러한 금리체제를 변동시켜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아까 걱정하신 대로 부동산 자금 내지는 단기화 되는 자금이 경제에 상당히 있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증시나 채권시장 쪽으로 가는 건 좀 더 생산적이라고 보고 너무 부동산 쪽으로 가서 투기가 일어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금이 부동산 쪽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정부가 세제나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서 막고 있는 것이고 공급 쪽에서 늘리고 있는 대책은 저희가 아무리 신속하게 취

저금리 유지에 따라
증가되고 있는 단기
부동자금은 주식 시
장 등과 같은 생산
적인 부문으로 유도
하도록 함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공급을 늘리기 위한 택지상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테스트포스 같은 순발력 있는 대응들을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의 합리화와 공급의 강화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러한 부동자금이 부동산 쪽에 가는 것을 막으면서 자금들이 좀 더 생산적인 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결국 우리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프로젝트들이 개발되지 않는 한 이러한 자금들은 계속 유동적인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또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는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이 되어지도록 하되, 투기가 붙는다든지 비정상적인 상황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된다면 한국은행과 정부가 협력을 해서 미세조정은 계속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금융상의 문제가 났을 때 이것이 과연 시스템 리스크냐 아니면 개인의 리스크냐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그렇게 썩 명료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경우에는 시장에 맡기고, 개별적인 리스크로 처리해야 할 걸 정부가 나서 가지고 개입을 해 버리고 어떤 때는 정부가 그걸 초반부터 선제적으로 해야 할 일을,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게 뻔한 걸 모르거나 시기를 놓쳐서 사후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치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기 경보 체제라든지 이런 시스템 리스크를 제대로 판단해 내는 능력을 개발해서 시장에 맡길 것은 확실하게 맡기고 우리 정부가 개입해야 할 건 확실하게 개입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정부 혁신의 중요한 하나의 항목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규제 개혁 문제는 지금 총리실에 약 100명 정도 민간과 정부

요원들이 있습니다. 50명은 특별 테스크포스이고 50명은 기존에 있던 규제개혁 위원들인데 그 동안 굉장히 많은 분야에 대해서 덩어리 규제를 없애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정책 당국자들 간에 조율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주일에 네 번 정도 경제 정책과 관련된 핵심장관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거의 눈빛만 봐도 대개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알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런 정책 조율에 있어서는 큰 불협화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융쪽에 있어서 정부는 산업으로서의 금융은 동북아 중심 차원에서 앞으로 금융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그걸 위해서 각 대학에서 우수한 인력을 많이 양성하겠다고 하는 얘기이고 여기에 소위 산학협동, 금융과 대학간의 협동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으로서의 금융은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결국 금융센터가 어떻게 리스크를 제대로 평가하고 그 리스크 관리를 하느냐, 리스크를 먹고 사는 것이 금융기관이니까 그 금융기관이 어떻게 리스크를 활용해 가면서 자금의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이 민간 부문과 더불어 가기 보다는 독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정갑영 연세대 교수) 우리가 균형이나 형평이나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 정부가 경제성장시키려고 많이 노력하는 정책 가운데 많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정부 혼자만 가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민간은 투자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정부 혼자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효과가 나지 않는데 정부가 민간을 끌어들이려는 정책적인 노력이 형평이나 균형에 즉, 흔히 말하는 코드 때문에 너무 많이 밀리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민간 설비 투자가 적다, 수도

권 규제만 완화하면 할 수 있는 데가 투자할 부분이 많고 민간기업들이 얘기를 합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대학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공동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정부의 생각은 수도권 일부 대학을 규제하고 정원을 줄이면 지방대학도 균형적으로 발전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지금 중고등학교부터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입학설명회를 하러 서울에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에 갔는데 학생 정원이 720명인데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이 240명이었습니다.

외국인 학교 유치를 통한 교육 부문 개선에 앞서 국내 학교와의 공정한 경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그리고 실제로 저희 대학에서는 외국대학이 들어와서 경쟁하는 걸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산업공동화 때와 마찬가지로 교육부문도 역차별 규제가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시장의 자율이나 민간부분에 여러 가지 자율화를 통한 정책 조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설비투자나 교육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많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데 지금 이런 정책이 계속되면 대학은 정말 완전히 경쟁력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국민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2008년도가 되면 수능을 등급만 준다고 합니다. 성적이 얼마인지 몇% 인지를 각 대학이 모릅니다. 1등급 2등급 이 성적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내에 있는 대학들은 1등급이 있는 학생만 보고 로또식으로 추첨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고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대로 하면 교육의 하향평준화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길게 보면 성장잠재력의 약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최도성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다음달에 벤처 활성화 정책을

벤처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은 지원규
모 보다는 지원 기
간을 늘려주는 방안
이 바람직함

발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인 자금지원도 하실 의향을 밝혀주셨습니다. 사실 10개중에서 8, 9개는 망하고 1개에서 대박을 터트리는 게 사실 벤처라는 점을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년동안 8, 9개 성공하고 하나가 실패하는 게 벤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벤처붐도 일어났었는데 저는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제대로 되려면 지원되는 자금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지원되는 자금의 기간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지원되는 자금이 대개 1년 2년 정도의 단기에 그치기 쉽고 위험이 별로 높지 않은 곳에 투자하려는 생각이 들어서 잘못 되면 돈을 빨리 회수하기 위해서 머니게임을 하게 되는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말이지요. 벤처가 활성화되어있는 미국이라든가 캐나다에 가서 보면 펜션캐피탈이라는 말을 붙여가면서 8년에서 10년까지 장기투자자금을 조성해서 투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조성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7년에서 10년 또는 8년에서 10년 정도까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에서 예컨대, 혁신형 중소기업 같은 경우 현재도 있는 제도이지만 투자에 대한 세액을 공제해주는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펴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요즘 상장되어있는 기업들의 상장유지비용이 사실 상당히 높은 게 사실입니다. 상장하고 있는 것이 반드시 이익이겠느냐 라고 질문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상장한 기업들, 특히 혁신산업쪽에 있는 상장기업들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추가로 합시다만 예컨대 법인세율을 낮춰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본다든지 하는 길이 있을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정숙 숙명여대 교수)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다도 인구증가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단기적인 문제보다 장기적인 문제에서 보면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도 기획예산처 같은 경우는 보육산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예산을 안배할 때 하나의 성장 산업의 일환으로서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특히 고령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지금 저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결국 핵심은 실업률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실업에 대한 정부의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덕수 부총리) 우선 문교수님이 말씀하신 저출산에 대한 정부 지출이랄까 이런 것들을 투자로 보자. 저희가 그렇게 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보육 등과 같은 부문에 대한 지출도 사실 상당 부분 투자적인 성격이 강한데 지금은 그게 사회적인 지출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봐야 되겠다 하는 작업을 기획예산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또 별로 성공사례가 전국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 문제 대응 시기가 다소 늦었지만 정부는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대처하도록 할 것임

사실 저희 생각에는 80년대 초반쯤에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시작했어야 하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가 산아제한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에 너무 압도되다 보니까 20년 정도는 늦어져 버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성공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90년대에 굉장히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써서 그분들의 출산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본래 프랑스 국민들의 출산율은 아직도 그렇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출산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보육 쪽을 신경 쓰도록 할 것인데 일단 자녀를 낳으면 부담이 되는 계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저주는 식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 2주 전에도 관련 각료들이 모여서 집중적인 토론을 5, 6시간 정도 했고 곧 무슨 대책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맹목적인 지원 정책 보다는 시장 원리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에 주력할 것임

최도성 원장님이 말씀하신 장기적으로 보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세액공제를 더 확대하자 이 문제는 현재 세액공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족하다는 전제가 나와야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데 현재를 투자가 안 되는 것이 세액공제 부분이 약해서 그렇다라는 평가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장유지비용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상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기업의 판단이고 건전성에 대한 규제는 상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와 직결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단 상장이 되면 일정한 의무를 해야지요. 거기에 비용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비용을 어떻게 볼 것이냐, 불필요한 비용을 우리가 부담시키는 게 있으면 당연히 그 부분은 합리화가 되어야겠지요. 그러나 상장사로서 건전성 규제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 공시의무, 거기에 따르는 비용은 분명히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상장을 한 기업이라도 더 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세제를 지원하고 법인세를 낮추고 하는 건 반대입니다. 증시에 상장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기업이 판단을 하되 상장을 했다면 투명성과 이런 걸 위해서 공시의무를 어느 정도 지고, 국가는 거기에 불필요한 규제와 서류의 제출, 이런 것들을 합리화시키는 정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마치 상장되는 것이 국

가가 기업을 위해서 뭐 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국가가 세금을 깎아주고 하는 건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교수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교육 당국, 학교 그리고 필요하면 제 3자적인 분들이 많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 상당부분 해결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리실에 있는 규제개혁 기획단이 제가 여기 오기 얼마 전에 대학의 행정규제 완화 방안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는데 상당 부분 지금 말씀하신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규제가 좀 걸러졌습니다. 그러나 그건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대화 채널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피드백이 되어서 많이 나아지지 않겠나 싶고, 본질적인 입학생의 선발문제 이런 것들도 좀 더 대화를 통해서 기존 있는 제도가 충분치 못하다는 걸 서로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뭔가 대안이 나올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균형과 발전에 대한 이념 논쟁이 아닌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균형과 발전과의 충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이 두 문제가 충돌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충돌합니다. 단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수도권 규제 완화해 가지고 단기적인 성장을 할거냐, 아니면 중장기적인 이 수도권에 있음으로서 발생하는 비균형적 발전 즉, 중장기적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판단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선에서 절충하는 형식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수도권의 공장이나 대기업 신설을 전면적으로 허용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우리가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일이 전면적으로 허용했을 때 그때의 모습

이 뭐냐, 이런 데에 대한 것들이 잘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모습은 없습니다. 완전히 명분과 이념과 이런 논쟁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제대로 결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는 건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그게 아니고 전면적으로 허용했을 때 수도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런 데에 대한 연구와 고민들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면 좀 더 국민적인 동의를 얻기가 좀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해 해외 소비와 해외 투자를 국내로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이재웅 교수) 요즘 경기가 부진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부진한 원인은 소비와 투자의 침체인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해외로 나가는 소비, 해외로 나가는 투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 한 해 의료나 유학, 또 50만명 이상이 해외에 나가서 골프를 쳤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나가는 돈이 한 12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GDP의 1.5%가 되는 상당한 규모의 소비가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기업들이 국내투자는 주저하면서 해외투자를 많이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해외로 나가는 소비를 어떻게 국내에 유치할 수 있는가, 결국은 서비스 산업 부문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것인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개방을 하든지 지원을 하든지 해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의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수익을 얻는 것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그 다음에 투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하고 외국인 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건 국내 투자건 국내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투자하는 것을 국내에서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고 생각하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에 들어와서 투자를 하면 돈을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돈을 열심히 번다, 그리고 돈을 열심히 버는 것만이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거래소라든가 그런 곳의 등록 기업, 상장기업의 절반 가량은 외국인 지분이고 또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절반 가량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장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외국인 투자라면 우리 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어느 정도 느껴야 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사회에 좀 기여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개방주의자이시고 합리주의자이신 부총리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하지만 외국인 투자는 국내에서 사회적인 책임을 인식한다든가 국내에 기여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저희가 그런 것도 참아야 합니까?

(한덕수 부총리) 저는 우선 무엇을 기여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 차원에서 최대한의 기여라는 것은 결국 고용을 유지하고 창출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지요. 그 외에 물론 사회를 위해서 불우이웃 돕기에 열심히 참여하는 건 하나의 법인의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것이고 제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외국인들을 일방적으로 옹호한다 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이지 않은 걸 요구하는 것도 굉장히 국가 경쟁력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을 기여해야 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웅 교수)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은행들이 커뮤니티 리인베스트먼트액트(Community Reinvestment Act) 등이 있어서 자기네들이 장사하는 지역사회에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어려운 서민 등

에 대해 자금 대출 등을 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바탕으로 그 기업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기여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그 기업 또는 은행이 M&A를 한다든가 또는 연준의 인허가 등을 할 때 감안을 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는 기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용 창출과 세금 납부를 통해 이루어지는 임

(한덕수 부총리)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 얼마나 대출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중앙은행의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그러한 제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외국자본이건 국내 자본이건 기업에 대해서 요구할 것이 뭐냐 하는 걸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고용 창출해서 제대로 된 버젓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다음에는 세금을 잘 내고, 그러니까 탈세하면 안 되지요. 탈세하는 기업은 내국인 외국인 막론하면 세금은 제대로 내도록 해야 되고, 나머지 지역사회에 대해서 기여하는 것은 외국 기업들도 상당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암참(Amcham)에서는 외환위기 이후에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파트너십 파운데이션(Partnership Foundation)도 만들고 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사례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식이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에 일정한 수준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뉴브릿지가 자기네들이 여기에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 2천만불을 기증했지요? 중소기업을 위해서 정책을 연구하는 중소기업연구원에 천만불을 냈고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자금, 소위 현금서비스나 이런 신용불량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고 있는 자산관리공사에 천만불을 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기여라는 것이 좀 더 자발적인 것이 아름다운 것 아니냐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만들어서 뭘 기

여하게 하자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한번 검토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득 양극화에 따른 빈곤층 확대 문제에 있어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 제고에 바람직함

그 다음에 소비 경기 부진의 문제 중에 큰 문제는 양극화 문제가 고착화되고 있는 점입니다. 또 일부 연구소에서 절대빈곤층 또는 빈곤층이 500만 명을 넘는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국가가 도와야 될 계층이 뭔지를 분명하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돕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세계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혹시나 제가 교수님 말씀에 답변을 하면서 기업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 소홀히 한다는 인상을 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리 및 교열

황동원 연구원 (dhwang@hri.co.kr) ☎ 02-3669-4024
